

## 한일 외교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걸렸던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관계 기조와 그간의 외교 문제들을 짚어본다.

### 1.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한일 외교 현안

#### □ 독도 영유권 주장

-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
- 그러나 일본은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옴
-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항의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근거를 들어 일본측 주장을 일축
- \* 2차 대전 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사실과,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한 연합국 사령부의 훈령 제1033호를 상기

#### □ 교과서 왜곡

-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지우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도록 하는 등 역사왜곡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82.6	(일) 문부성, 고교 역사교과서에 ‘중국침략’을 ‘중국진출’로 표기하라 지시
1986.7	(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고교 교과서 ‘신편일본사’ 검정에 한·중 반발. 일본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 거쳐 최종합격
1996.6	(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1997.1	(일)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발족
2000.9	(일) 침략 미화, 황국사관 중심의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 파문
2000.12	(일) 새역모(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 200여 곳 수정
2001.3	(일) 일본 우익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결정
2001.4	(일) 일본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한국 정부 강력한 유감 표명
2003.가을	(한) 노대통령, 독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지시
2004.2	(한) NSC에 독도 TF팀 결성
2004.4	(일) 새역모, 개정판 역사 교과서(후소샤 발간) 신청본 검정 접수
2004.9	(한) ‘독도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시작
2004.11	(일) 문부과학성, 후소샤에 검정의견 제시 / 후소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개악
2004.11.27	(일) 문부성, “위안부 같은 표현이 요즘 교과서에서 줄어들어 다행” 발언 파문
2004.12.28	(일) 도쿄교과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추가
2005.1	(한) 부처별 독도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 시작
2005.3.1	(한) 노대통령, “일본은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연후에 화해해야”
2005.3.16	(한) 정부, ‘독도 입도 제한조치’ 완화 발표
2005.3.29	(일)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영토 명기 주장
2005.3.31	(일) 문부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
2005.4.5	(일) 문부성, 중등교과서 검정 결과 공식 발표
2006.4	(일) 일선 학교에서 채택본 사용 예정

##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 6월 26일 미 하원 외교위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명백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7월 30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 위안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책임을 요구했다는 데 의의

## □ 결의안 주요 내용

-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히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킬 것 등을 요구
- 일본 정부의 위안부 시인·사과 방법과 관련,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

## □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 있던 2006.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
-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총리 취임 이후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해왔으나 8월 15일만은 피해왔었으나, 8월 15일 오전 7:40 연

미복 차림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라고 서명

- 일본 현직 총리가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후 처음 있는 일

## 2. 이명박 정부의 한일관계 기초

### □ 과거 덮고 한·일 셔틀외교 복원

-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회담을 갖는 셔틀외교<sup>1)</sup>의 재개로 교류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전망
-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계속됐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입장
  - \*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11일 통의동 집무실에서 일본중의원 대표단을 만나 적극적인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과거에 얽매이면 오늘이 불행해진다”고 강조
  - \*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을 위해 임기 중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2005년 1월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면서 한일 교류는 전면 중단
-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신희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4월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신(新) 우호협력선언’ 을 공동발표 할 예정

1) 셔틀외교란 한국과 일본 정상이 연1회 상호 방문하여 양국간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의미, 당초 리조트에서 편하게 회담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 6월까지 모두 3번 이루어졌지만 야스쿠니문제를 계기로 한 동안 폐지되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셔틀외교는 3년 만인 2008년 4월에 부활했다.